



[해설] 자동차보험 약관-판례기준 제각각 분쟁 우려 03



Economy

코스피	2072.33 (0.00)	코스닥	716.53 (0.00)
금리 (미국 3년)	1.54 (-0.01)	환율 (원/달러)	1181.40 (+2.80) (7일)

지자체, 포스코·현대제철에 '조업중단 10일' 행정처분

# 여전한 기업욕죄기... 정부 탁상행정예 8천억 날릴판

<산업계>

환경단체 "대기환경법 위반" 제동 대체설비 없고 관련 법령도 없어 중단 이후에도 피해 되풀이 우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5고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 제조 산업의 기반인 철강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철강 산업은 자동차·조선·기계·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이어서 '산업의 쌀'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동으로 철강산업이 '조업중단'의 위기를 맞았다. 환경부를 비롯해 충남도, 경북도,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중지 10일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

환경단체는 철강업계가 대기오염 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고로 블리더(고로 내부에 공기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안전밸브장치)를 통해 불법으로 배출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지자체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며 '조업중단'이라는 초강

력 결정을 내렸다.

◆갈피 못잡는 정부 규제에 산업계 타격

환경단체와 지자체의 반발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가 '조업중단'의 상황에 처했지만 이후 해결 방안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고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가스를 고로 블리더로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인데 현재 업계 내에는 이를 대체할 설비가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조업중단'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로 정비를 위해 블리더 개방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관련 법령 등 규

정조차 마련되지 않아 업계의 피해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오염 배출량과 위해성 측정을 위한 조사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달 드론을 통해 블리더 개방에 따른 배출가스 수준을 한 차례 조사한 게 끝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는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지자체는 환경문제를 야기한 만큼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지자체별로 규제 처분을 내리는 과정도 상이하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청문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지만, 충남도는 이같은 과정조차 없이 행정처분을 강행했다. '조업중단'은 법률 위반사항이어서 청문회 과정이 필요없다는 것이 충남도의 입장이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社告

## 메트로경제와 함께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동반자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에 이어 2018년 3월 유가지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해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제 메트로경제는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심층정보를 보다 집중 발굴해 지면과 온라인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메트로경제는 빅데이터 시대, 미디어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17년 역사의 메트로경제와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취재(수습)기자
- 모집내역: ① 전형방법
  - ▲ 1차: 서류전형 ▲ 2차: 취재 역량평가 ▲ 3차: 면접(블라인드 방식)
- ② 모집인원: 0명
- ③ 응시자격: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예정자도 응시가능) <공통사항> ①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해당자 우대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 (☞ 지원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② 졸업증명서 1통, 석·박사 학위증명서(해당자) 1통
  - ③ 반명함판 사진 2장(지원서와 수험표 부착)
- ※ 이메일 접수자 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②③항의 서류를 면접 시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2019년 5월 27일~ 2019년 6월 12일
  - ② 접수방법: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6월 12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18(옥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앞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본지 웹사이트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시험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로 문의(전화 02-721-9826)



36년 만에 U20 월드컵 4강 진출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축구대표팀의 조영욱(오른쪽)이 8일(현지시간) 폴란드 비엘스코 비아와에서 열린 2019 U20 월드컵 8강전 세네갈과의 경기 연장 전반 세 번째 골을 넣고 오세훈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한국은 연장까지 3-3으로 경기를 마쳐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세네갈을 3-2로 물리치고 36년 만에 4강에 진출해 미국을 꺾고 올라온 에콰도르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뉴시스

## 美中분쟁에 동남아로 눈 돌리는 韓기업들

美 "제재 동참" 中 "거래 유지" 압박 기업 생산기지 베트남 이전 등 분주

미중간 갈등이 대한민국 경제를 강타한 가운데,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끈질긴 압박을 받는 중이다. 미국에서는 중국 제재에 동참하라는, 중국에서는 따르지 말라는 요구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화웨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후, 중국과 거래를 끊으

라는 요청을 이어왔다. 최근까지도 국내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5G 안보 영향을 우려한다고도 언급했다.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다. 최근 주요 인사들이 공식 국내에 방문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직접 글로벌 IT 기업들을 불러모았다.

요구 사항은 거래를 끊지 말아달라는

내용이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영국 A RM과 핀란드 노키아 등에도 함께 의견을 전달했다. 대신 지식재산권 보호와 열린 무역을 약속하며 회유에 나섰다.

국내 기업들은 쉽게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눈치다. 중국 매출 비중이 크거나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비중도 30%에 달한다. 벌써부터 경제 성장 전망치도 빠르게 하향 수정 중이다. 그렇다고 기술과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미국을 포기하기도 어렵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 수출·소비 경고등... 재정확대론 힘받나

1분기 명목 민간소비 0.5% ↓ 정부지출이 총소비 떠받쳐

민간소비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 1분기에 정부지출이 총소비를 겨우 떠받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 전쟁에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마저 반등을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단기적으로라도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기준연도 2015년·계절조정)에 대한 최종소비지출(총소비)은 308조5000억원으로 작년 4분기(308조8000억원)와 비교해 3000억원(-0.1%) 줄었다.

1분기 한국경제가 명목 가치 기준으로 0.8% 역성장(실질 성장률은 -0.4%)한 점을 고려하면 총소비는 그나마 버

터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민간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소비가 전체 소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라 분석이다.

실제로 최종소비지출 구성항목 중 정부소비는 1분기 중 9000억원(1.1%) 늘어난 반면, 민간소비는 1조2000억원(-0.5%) 감소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계정 개편으로 지난해 GDP가 1893조원으로 6.2% 늘어나다 보니 GDP 대비 비율이 국가채무가 38.2%에서 36%로, 가계부채도 86%에서 81%, 기업부채는 102%에서 96%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나 기업·정부가 여러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여력이 좀 더 커지게 됐다"면서 "재정의 경우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